■ 주간 증시 포커스

차익실현 욕구 증대 보합세 예상
외국인 IT섹터 순매도 이어질 듯
정유·철강·은행·보험주 대응을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 본 코너에서 7월 28일자로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1%이상 하락한 것이 두 번째라고 언급했는데 지난 3일 코스피지수는 또다시 1.68%(40.78포인트) 하락하며 2400선이하로 주저 앉았다. 지난 8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IT섹터 및 금융업종에 대한 차익실현매도가 증가하며 수급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이었다. 3일 갑작스런 하락요인으로 외국인의 IT업종에 대한 투매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세법개정안중에 법인세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세율인상발표(기존 22% 25%로 인상), 비거주자/외국법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기존 25%이상보유에서 5%이상 보유로 대상 확대),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외국인이 지수하락을 이끌었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현물 4027억원과 선물 9120계약(환산 약7159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외국인은 2조 1909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순매도 컸던 전기전자업종은 7월초부터 순매도가 시작되었고 7월한달간 2조 3646억원을 기록하였는데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개인투자자가 1조 8358억원과 금융투자 및 삼성전자자사주 매입 등으로 매도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IT 섹터에 누적된 주가상승으로 상승피로도가 높아지며 외국인의 비중 축소가 지속되었고 2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갑작스런 수급공백상태로 하락폭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IT섹터의 조정 요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향과 글로벌 IT 기업의 투자확대로 IT 사이클의 고점 우려를 들 수 있는데 외국인의 국내 IT 섹터에 대한 순매도는 이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코스피지수대비 상대적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시점은 주도주 조정기간으로 IT 섹터 매수는 가격이나 타이밍을 한단계 낮춰 잡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코스피지수 변동성확대속에서 10일 옵션만기일이 있다. 최근 옵션만기일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않았는데 필자는 이번 옵션만기일 보다는 옵션만기일 이후 한주간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의 수급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주간 현선물의 수급방향성 및 강도가 9월 선물옵션동시 만기를 겨냥한 외국인의 방향성매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몇차례 언급했듯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과 자산축소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금리인상보다는 자산축소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산축소 규모가 당초예상보다 클 경우 글로벌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수급영향력이 큰 국내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국내증시 상승흐름속에서 파생상품 투기세력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었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9월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추구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코스피지수는 IT섹터 부진이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하락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정제마진 개선 수혜가 기대되는 정유 및 화학주와 중국철강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수익개선이 기대되는 철강주, 그리고 금리인상구간에서 강세가 예상되는 은행/보험주로 대응이 좋아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수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료에 따른 단기적인 종목별 순환매는 가능하겠지만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기전에는 코스피지수대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산물 경쟁력 향상 '농업인 조직화' 나섰다

농협전남본부, 구례 오이·호박·매실 재배농 등 교육
공동판매 등 유통 문제 해결 지역 농가 수익 향상

전남농협이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익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농업인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면서 점차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산지의 규모화와 농가조직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은 지난 4일 농협구례교육원에서 구례지역 오이, 호박, 매실, 단감 재배 농업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펼쳤다.

농산물유통 환경변화와 산지 대응전략 등 농가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정부 산지조직 육성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강진지역 감, 참다래, 블루베리 등 과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통합마케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가조직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처럼 전남농협이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현장교육에 나선 이유는 지역 농가들의 수익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농민들이 '뭉쳐야' 살기 때문이다.

산지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이루면 공동판매 등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유통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생산 농가들의 가격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대량생산이 필요한 계약생산·판매는 물론, 지역 특산물 등 표준화된 농산물의 재배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마케팅 등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작목반 등의 형태로 조직화되면 생산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농가조직화와 산지규모화가 시급함에도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미래경영연구소의 'NH농협조사월보'를 살펴보면 지난 2000~2015년간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등 생산자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수는 2000년·2015년 모두 25만1000호다.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난 4일 농협구례교육원에서 구례지역 농업인 250여명을 초청해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이에 따라 전남농협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농업인을 상대로 조직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주 농산물, 특산물에 맞춘 재배기술과 마케팅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흥묵 전남농협본부장은 "농업부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조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소규모라도 농가가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든, 어디든 찾아가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다. 농업인 조직화를 도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농촌경제연-예일대 기후변화 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창길)은 지난 3일 미국 현지에서 예일대 산림환경대학원(학장 인디 버크)과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기후변화의 영향 등 연구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 성과

올 2487명 … 지난해보다 12% 증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 따르면 공사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올해 7월까지 248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은 농지매매나 임대 등을 통해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맞춤형 농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원받은 청년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32.3세로 나타나면서 해당 사업이 영농후계자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농지 지원을 받은 대상도 꾸준히 늘어 2014년 2667명, 2015년 2958명, 2016년 3080명으로 연평균 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

중복·편중 방지 현장점검 등
농식품부, 연말까지 집중감사

이달부터 농업분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예방과 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집중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지원받는 농업인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부정수급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5~10명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해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가축분요고동자원화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한다.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올해 예산이 50억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큰 만큼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한다. 오는 11월 중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결과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에도 나선다. 급변하는 보조금제도 및 시스템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북구, 삼각동 대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 209, 209-1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대지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 매매 36억
- 온천지구 내 "직업 테마 파크" 등 600억 투자 예정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